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헝가리

Republic of Hungary

2021년 6월 10일 | 팀장(G2) 오경일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93천 km <sup>2</sup> 	<b>인구</b> 977만 명 (2020 <sup>e</sup> ) 	<b>정치체제</b> 내각책임제 	<b>대외정책</b> 실리 위주 외교정책 
<b>GDP</b> 1,546억 달러 (2020 <sup>e</sup> ) 	<b>1인당GDP</b> 15,820달러 (2020 <sup>e</sup> ) 	<b>통화단위</b> Forint(Ft) 	<b>환율(U\$기준)</b> 308.00 (2020) 

- 헝가리는 중부 유럽의 내륙국으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세르비아와 국경을 접하여 동-서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이점을 지니고 있음.
- 1989년 체제 전환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통해 개방적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성공하였으며,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2018년 4월 총선에서 우파 민족주의 성향의 청년민주동맹(FIDESZ)이 주도하는 여당 연합이 의석의 2/3 이상을 획득하며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4선에 성공하는 등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어 2022년 4월로 예정된 차기 총선까지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자 비셰그라드(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로 구성된 중부 유럽 4개국 협의체) 회원국으로 역내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NATO와 적대관계에 있는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는 등 실리 위주의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사법부 독립성 침해 및 인권 문제로 EU와 갈등을 빚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89. 2. 1 (북한과는 1948. 11. 11)

**주요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90), 사증면제협정('91),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95), 경제협력협정('05), 사회보장협정('07), 취업관광프로그램협정('13), 원자력평화적이용협정('14), 운전면허증상호인정협정('15), 항공업무협정('15), 군사비밀정보교환협정('16)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8	2019	2020	주요품목
수출	1,966,932	2,477,567	2,477,567	전자제품, 수송기계, 석유화학제품
수입	693,884	496,286	496,286	축산물, 전자제품, 수송기계

**해외직접투자 현황(2020년 말 누계, 총투자기준)** 190건, 1,934,387천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sup>e</sup>
경제성장률	2.1	4.3	5.4	4.6	-5.0
소비자물가상승률	0.4	2.4	2.8	3.4	3.3
재정수지/GDP	-1.8	-2.4	-2.1	-2.0	-8.5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1).

### 3년 연속 4~5%대 성장을 기록했던 헝가리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5.0%의 역성장 추정

- 헝가리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EU 회원국으로서 EU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접근, 유럽의 중앙부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을 살린 외국인투자 유치 등에 힘입어 2017~19년 3년 연속 4~5%대의 양호한 성장을 시현하였음. 그러나 2020년 1월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의 전 세계적인 여파로 2020년 세계 경제는 -3.3%, 세계 무역(상품+서비스)규모는 -8.5% 역성장한 것으로 추정됨(IMF).
- 유로존 경제 역시 모든 회원국들이 경기침체에 직면하여 2020년 -6.6%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유로존 중심의 제조업 제품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었음.
-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국적인 봉쇄(lockdown), 필수 불가결한 업종(식료품점, 약국 등)을 제외한 모든 영업장의 영업 중단 조치 및 그로 인한 실업 증가와 가계소득 감소는 생산활동과 민간소비의 급격한 동반 위축으로 이어져, IMF는 헝가리 경제가 2020년 -5.0% 역성장한 것으로 추정하였음.
- EIU와 IHS Markit 역시 헝가리의 2020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5.1%로 추정하였음.1) 2021년에는 경기반등 및 기저효과로 4%대 초/중반의 경제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되나, 인구 감소세 지속으로 인한 성장잠재력의 한계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추정됨.
- 2016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계속 50 이상을 유지해 오던 헝가리의 제조업 PMI<sup>2)</sup>는 2020년 3월 28.5로 집계되어 전년동월(52.79)은 물론 전월(50.26)에 비해서도 대폭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회복되어 2021년 4월 50.80을 기록하였음.
- 헝가리 정부의 경제정책은 당분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의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의 확장적 운용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나, 2020년 말 GDP의 73.5%로 추정되는 높은 공공채무(public debt) 비율과 포린트화 약세 지속이 정책 결정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고 있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1.4월); EIU Country Report(2021.5월); IHS Markit Global Economics Profile(2021.5.25자).

2) Purchasing Managers' Index. 미국 구매관리자협회(NAPM)가 매달 제조업 동향에 대한 설문을 실시해 산출하는 제조업 분야의 경기지표. 지불가격, 신규주문, 출하정도, 생산, 재고, 고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업의 가격 결정력과 인플레이션 위험 등을 평가할 수 있어 기업신뢰도 평가를 위해 선진국에서 널리 이용됨. PMI가 50인 경우는 전월대비 변화가 없는 상태이고, 50 미만인 경우는 경기수축을, 50 이상인 경우는 경기팽창을 의미함.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매경닷컴)

## 국내경제

- 2020년 3월 18일 행정명령에 의해 모든 개인·기업 대출에 대해 2020년 말까지 원리금 지급을 유예하는 포괄적 지불유예(blanket moratorium)가 시행된 이후 미 달러화 대비 포린트화 가치는 대체로 약세를 지속하고 있음.
- \* 미 달러화 대비 포린트화 환율(분기말, IMF) : 286.14('19.Q1) → 284.08('19.Q2) → 306.06('19.Q3) → 294.74('19.Q4) → 327.07('20.Q1) → 317.83('20.Q2) → 311.40('20.Q3) → 297.36('20.Q4) → 309.66('21.Q1)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 감소와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상쇄되어,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과 거의 동일한 3%대 초반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

- 코로나19 사태의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해 포린트화의 미 달러화 대비 연평균 환율이 헝가리 공산 정권 붕괴 이후 최고 수준인 308.00를 기록하여 수입물가 상승을 초래하였으며,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 시행이 2022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됨.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각국의 농축산물 생산 차질과 이에 따른 농축산물 수출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도 물가상승 압력을 더욱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였음.
- 그러나 동시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 감소, 생산활동 부진에 따른 원자재(특히 원유)의 국제가격 하락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상당 부분 상쇄되어, 2020년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3.4%)와 거의 동일한 3.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한편, 2021년에는 경기부양을 위해 시장에 공급된 유동성의 회수를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의 시행과 포린트화 가치 회복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을 가정해도, 유동성 과다와 국제유가 회복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20년보다 상승하여 최고 4%대에 이를 전망이다.
- 헝가리의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기관별 전망치는 IMF 3.9%, EIU 3.8%, IHS Markit 4.5% 등임.

###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지출 증가로 2020년 재정수지 적자 폭등 추정

- 헝가리의 재정수지 적자는 최근 수년간 GDP 대비 -2%대 초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기침체로 세수가 위축되어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기부양 등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지출 증가에 따라 2020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2.0%) 대비 4배 이상 폭등한 -8.5%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GDP 대비 공공채무 비중도 전년(65.5%)보다 상승한 73.5%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헝가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진정 후 중기적으로 재정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헝가리의 2021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에 대한 기관별 전망치는 IMF -6.5%, EIU -6.9%, IHS Markit -7.9% 등으로, 헝가리 정부의 재정적자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 간의 -2%대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sup>e</sup>
경 상 수 지	5,855	2,769	636	-620	167
경상수지/GDP	4.6	1.9	0.4	-0.4	0.1
상 품 수 지	4,391	1,896	-1,926	-3,379	-930
상 품 수 출	86,949	96,278	104,744	104,211	101,467
상 품 수 입	82,558	94,832	106,670	107,590	102,397
외 환 보 유 액	25,406	27,436	29,649	29,873	38,999
총 외 채	146,882	154,023	153,842	147,301	214,368
총외채잔액/GDP	114.3	107.7	96.3	95.6	165.8
D.S.R.	58.9	48.7	48.3	48.5	54.6

자료: IMF, EIU

###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국제 공급망 및 관광 부문의 타격에도 불구하고 2020년 경상수지는 불황형 흑자 기록 추정

- 헝가리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분야 수출에 기반한 상품수지 흑자를 근간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해 왔으나, 핵심 수출시장인 EU의 경기침체로 2018년 상품수지가 적자 전환한 뒤 2019년에는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경상수지도 GDP의 -0.4%에 해당하는 적자로 전환되었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국제 공급망 및 관광 부문의 타격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가 GDP 대비 약 0.1%의 불황형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수출수요와 내수수요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동반 위축되어 상품수출과 상품수입 모두 감소하였으나, 투자 위축으로 인한 자본재 수입 감소와 민간소비 위축으로 전년대비 상품수입 감소폭(-4.8%)이 상품수출 감소폭(-2.6%)을 앞질러 상품수지 적자가 전년대비 72.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헝가리 GDP의 약 7%를 점유하는 관광 부문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헝가리 정부 및 각국의 여행 제한 조치로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가 흑자를 유지하여 (단, 흑자금액은 전년대비 43.8% 감소) 경상수지의 불황형 흑자를 가능케 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헝가리의 2021년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에 대해 IMF는 소비와 투자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로 -0.4%의 적자 전환을 전망한 반면, EIU와 IHS Markit는 관광 부문 회복과 그에 따른 서비스수출 증가를 기대하여 각각 0.2% 및 2.3%의 흑자 유지를 전망하였음.

## 외채상환능력

### 단기외채상환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외채상환 위기 발생시 EU 차원의 금융지원 가능

- 총외채잔액의 GDP 대비 비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2016년 말 114.3% → 2019년 말 95.6%),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제가 역성장한 결과 동년 말 165.8%로 급등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비교적 높은 수준임.
- 2016~19년의 4년 연속 연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월평균수입액의 3개월분에 미달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입 감소의 결과 3.4개월분으로 일시적 반등 추정) 같은 기간 D.S.R.도 줄곧 40% 이상을 지속하여(2020년 말 54.6%로 추정) 단기외채상환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다만, 헝가리는 EU 회원국으로서 외채상환 부문의 위기 발생시 EU 차원의 금융지원을 통한 안정화가 가능하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음.

## 구조적취약성

### 기계류, 전기기기, 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구조 및 산업구조

- 헝가리는 1989년 체제전환 이후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 구조를 형성함. 이는 유럽 내 다국적기업들이 유럽 중앙부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수준을 견비한 헝가리를 조립/생산 거점으로 삼고 헝가리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EU 전역으로 수출하는 역내 분업 생산구조에 기인한 것임.
- 헝가리의 대규모 기업은 대부분 외국자본 소유이며, 헝가리 내수시장보다는 유럽 시장을 겨냥한 생산 기지 운영을 위해 헝가리에 진출하고 있음.
- 헝가리의 산업구조는 HS Code 분류상의 제84류(보일러·기계류), 제85류(전기기기·TV·VTR) 및 제87류(승용차, 화물차 등 일반차량)의 3대 품목이 최근 3년 간 전체 상품수출의 55% 이상을 점유하는 제조업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표 1] 최근 3년 간 헝가리 상품수출에서 HS Code(2-digit)별 상위 3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HS Code	품목명	2018년	2019년	2020년
84	보일러·기계류	17.67%	16.54%	15.80%
85	전기기기·TV·VTR	21.06%	22.81%	24.52%
87	일반차량(승용차, 화물차 등)	16.53%	17.80%	16.39%
3대 품목의 비중 합계		55.26%	57.16%	56.71%

자료: UN Comtrade

### 수출 및 EU에의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로 외부충격에 취약

- 헝가리 경제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이 GDP의 160%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원유 등 주요 원자재의 국제가격 변동이나 교역상대국의 경기침체 등 외부충격에 큰 영향을 받음.
- 2019년 기준 세계 194개국 중 헝가리의 1인당 GDP는 52위, GDP 규모는 57위이며, GDP 규모가 싱가포르(35위), 홍콩(36위) 등 동아시아의 도시국가보다도 작은 수준임.
- 대부분의 EU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헝가리 역시 수출과 외국인투자 유입 원천이 EU 지역에 치중되어 경제성장, 경상수지, 외국인투자 유입, 외환보유고 등이 EU 및 유로존의 경기동향에 크게 좌우됨.
- UNCTADstat에 의하면, 헝가리의 2019년 상품무역에서 유럽 지역은 상품수출액의 88.3% 및 상품수입액의 81.1%를 점유하고 있음.

[표 2] 2013~20년 헝가리, EU, 유로존의 경제성장률(%) 동향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sup>e</sup>
헝가리	1.9	4.2	3.8	2.1	4.3	5.4	4.6	-5.0
EU 전체	0.0	1.7	2.5	2.1	3.0	2.3	1.7	-6.1
유로존 전체	-0.2	1.4	2.0	1.9	2.6	1.9	1.3	-6.6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1)

## 구조적취약성

### 내륙국이라는 지리적 입지는 국제무역 외연 확대에 지장 초래

- 헝가리는 바다에 면하지 않은 내륙국으로 항만을 통한 상품의 수출입을 다른 국가들의 항만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미주, 아시아 등지의 수출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EU 역내국들과의 무역에 더욱 치중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 국제무역 외연의 확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성장잠재력

### 유럽의 중앙부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 및 고속련 저임금 인적자원 보유

- 헝가리는 구소련 붕괴와 냉전 종식에 따른 체제 전환 이후 개방적 자유시장경제로의 전환에 성공하여 양질의 인프라 및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EU 회원국으로서 EU 역내의 상품 및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시장을 확보하고 있음.
- 지리적으로 7개국과 국경을 접해서 동유럽과 서유럽에 모두 접근성이 좋은 중동부 유럽의 중심에 위치하여, 이러한 지정학적 이점을 십분 활용하여 EU 내 생산 및 물류 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헝가리의 고속련 저임금 노동력에 주목한 다국적기업들이 유럽 지역을 커버하는 서비스공유센터(SSC) 및 R&D 센터를 헝가리에 설립, 운영하고 있음.
- OECD에 의하면 2019년 헝가리의 1인당 평균임금(26,223달러)은 OECD 35개 회원국들 중 33위이자 유럽 지역의 25개 OECD 회원국들 중 24위 수준임. 인접국들이자 역시 체제전환 국가들인 슬로베니아(40,220달러), 폴란드(31,970달러), 체코(29,281달러) 등은 1인당 평균임금이 헝가리보다 높은 수준임.<sup>3)</sup>
-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BP, IBM, Vodafone 등 다국적기업들은 저렴한 노동력의 활용을 위해 서비스공유센터를 헝가리로 이전했고, Bosch, GE 등의 R&D 센터 설치도 이어졌음.

### 외국으로의 두뇌 유출과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과 성장잠재력에 가장 큰 위협요인

- 냉전 종식과 체제 전환 이후 지속된 서유럽 국가로의 인력 유출은 헝가리의 EU 가입으로 더욱 가속화되어, 2008~18년 100만 명 이상이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아 외국(주로 EU 회원국)으로 이민한 것으로 집계됨.
- 아울러 헝가리의 출산율은 2018년 1.49에서 2019년 1.48로 하락하는 등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헝가리 정부는 자국 내 부부 20% 이상이 불임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음.
- 이처럼 지속적인 인구 감소(2015년 986만 명 → 2019년 976만 명 → 2050년 830만 명으로 감소 전망)와 두뇌 유출은 헝가리의 국가경쟁력에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헝가리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여, 2020년 2월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 비용을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있음.

3) 2019년 8월 불변가격(constant price) 미 달러화(PPP 기준) 환산액. (자료: OECD.Stat)



## 정책성과

### EU 기금을 재원으로 추진한 중장기 경제성장계획 "Szechenyi 2020"의 결과 2014~19년 유럽 신흥국 평균 이상의 경제성장을 유지

- 헝가리 정부는 고용, 혁신, 교육, 사회통합 및 기후·에너지의 5개 분야 목표 달성을 위한 EU의 성장 전략인 'Europe 2020'에 대응하여 중장기 성장계획 'Szechenyi 2020'을 수립, 2014~20회계년도 기간 동안 배정받은 EU 기금<sup>4)</sup>(219억 유로) 포함 총 257억 유로의 예산을 경제개발(35.1%), 도시개발(15.5%), 교통개발(15.2%), 환경·에너지(14.7%) 등에 집중 투자한 결과 2014~19년의 6년간 경제성장률이 유럽 신흥국 평균 이상을 지속하였음.

[표 3] 2014~19년 헝가리 및 유럽 신흥국 평균 경제성장률(%) 동향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헝가리	4.2	3.8	2.1	4.3	5.4	4.6
유럽 신흥국 평균	1.8	1.0	1.9	4.1	3.4	2.4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1)

### 외국인투자에 개방적인 정책 기조로 핵심 산업 부문에 외국인투자 대거 유치

- 헝가리는 외국인투자(특히 제조업 부문)에 개방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법인세율은 2020년 말 기준 몬테네그로와 더불어 유럽 국가들 중 최저 수준인 9%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며 자동차, 전기·전자 등 국가적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오고 있음.
- 2020년 말 기준 유럽 국가들 중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몰타(35%)이며, 프랑스(32.02%)와 포르투갈(31.5%)이 그 뒤를 잇고 있음. 헝가리 주변국들의 경우 오스트리아 25%, 슬로바키아 21%, 폴란드/체코/슬로베니아 19%, 크로아티아 18% 등 모두 헝가리보다 현저히 높음.<sup>5)</sup>

### 최근 세계은행의 기업경영환경 조사에서는 전보다 부진한 순위를 기록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20 보고서에서 헝가리는 조사대상 190개국 중 전년대비 4단계 하락한 52위를 기록, 전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음.
- 통관행정(Trading across borders) 부문에서는 1위를 차지하였으며 재산권등록(Registering property, 29위) 및 자금조달(Getting credit, 37위) 부문에서도 29위로 양호한 평가를 받은 반면, 건축인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108위) 및 전력공급(Getting electricity, 125위) 부문에서는 중하위권에 그쳤음.

4) 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ESIFs) :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 간의 사회·경제적 결속을 강화하고 지역간 발전 불균형 해소 및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국에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총 3,518억 유로를 지원하며 특히 동유럽 회원국들에게 집중적으로 배분함. 동유럽 국가 중 폴란드가 전체 기금의 22%로 가장 많은 기금을 배정받았고, 이어 루마니아 6.5%, 체코 6.2%, 헝가리 6.2%, 크로아티아 2.4%, 불가리아 2.2% 순서로 배정받음.

5) 자료: Tax Foundation. (taxfoundation.org/publications/corporate-tax-rates-around-the-world)

## 정책성과

### EU에 대한 과도한 경제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의 성과는 현재까지 미미한 수준

- 헝가리 정부는 EU에 과도하게 연계된 경제구조의 체질 개선을 위해 중국, 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신흥 경제국들과의 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며, 이를 통해 EU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과는 미미한 수준임.
- 2019년 헝가리 상품무역의 지역별 비중<sup>6)</sup>을 보면, 유럽 지역이 상품수출액의 88.3% 및 상품수입액의 81.1%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 반면, 아시아 지역의 비중은 상품수출액의 6.2% 및 상품수입액의 15.9%에 불과함.
- 아울러 유럽-아시아 외의 지역(미주, 대양주, 아프리카)의 비중은 상품수출액의 5.5% 및 상품수입액의 2.9%로 더욱 미미한 수준임.
- 유럽 중에서도 EU 28개 회원국의 비중은 상품수출액의 80.9% 및 상품수입액의 73.7%이며, 28개 회원국 중에서는 독일이 상품수출액의 27.7% 및 상품수입액의 25.3%로 각각 최대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

[표 4] 2015~19년 헝가리 상품수출액의 지역별 비중

수출상대국	2015	2016	2017	2018	2018
유럽	85.6%	85.9%	86.6%	87.6%	87.6%
> (EU)	(79.1%)	(79.5%)	(79.6%)	(80.7%)	(80.9%)
>> (독일)	(27.3%)	(27.5%)	(27.3%)	(27.3%)	(27.7%)
아시아	7.7%	7.7%	7.7%	6.7%	6.2%
> (중국)	(1.8%)	(2.2%)	(2.3%)	(1.9%)	(1.4%)
그 외 지역	6.6%	6.3%	5.7%	5.6%	5.5%

[표 5] 2015~19년 헝가리 상품수입액의 지역별 비중

수입상대국	2015	2016	2017	2018	2019
유럽	83.8%	84.2%	84.1%	83.1%	81.1%
> (EU)	(76.9%)	(78.1%)	(76.7%)	(75.6%)	(73.7%)
>> (독일)	(26.2%)	(27.0%)	(26.5%)	(25.9%)	(25.3%)
아시아	13.2%	12.9%	13.0%	14.3%	15.9%
> (중국)	(5.3%)	(5.3%)	(5.1%)	(5.4%)	(6.1%)
그 외 지역	2.9%	2.9%	3.0%	2.6%	2.9%

자료: UNCTADStat

## 정책성과

### 헝가리 정부는 2020년 4월 6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경제계획 발표

- 2020년 4월 6일 헝가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코자 다음의 5가지 사항을 골자로 하는 긴급 경제계획을 발표하였음.
  - 1) 기존 고용의 유지 : 고용주가 시간제 일자리 유지시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부담
  - 2) 신규 고용의 창출 : 정부는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 4,500억 포린트(약 12억 유로) 투자
  - 3) 핵심적 경제 분야 지원 : 관광/여행, 건설, 영화/엔터테인먼트, 농업, 보건, 식음료, 화물운송, 교통 분야에 2조 포린트(약 55억 유로) 규모의 정부 보증 또는 보조금 지원
  - 4) 기업 앞 유동성 공급 : 내국기업에 대한 장기 저리 대출 제공
  - 5) 가계 및 연금생활자 보호 : 은퇴자들은 2021~24년 기간 중 13개월 동안 연금 수령
- 헝가리 정부는 동 계획의 추진을 위해 1.9조 포린트(약 52.3억 유로) 규모의 특별경제회생기금(special economic recovery fund)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음. 금년도 예산 중 37억 유로를 동 기금으로 전용하고, 부족분은 헝가리 내의 다국적기업들 및 은행들에 대한 특별세 부과, 지방세 중 자동차세 징수액의 일부 이전, 정당별 교부금의 50% 삭감 등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임.

## 정치동향

**집권 여당 연합이 의회 의석의 66.8%를 보유하여 정치적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으나, 오르반 총리의 노골적인 극우 민족주의 성향과 독재 추구로 야권은 물론 EU와도 갈등 누적**

- 2018년 4월의 총선에서 현 집권 여당인 청년민주동맹(FIDESZ)과 기독교민주인민당(KDNP) 주도의 보수 우파 연합이 전체 199석 중 133석(66.8%)을 획득하며 빅토르 오르반 총리도 4선에 성공하는 등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어 2022년 4월로 예정된 차기 총선까지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여당 연합은 코로나19 사태를 자신에 대한 권력 집중의 기회로 이용한 오르반 총리의 주도하에 향후 EU 역내의 각종 현안들, 특히 인권과 민주주의 관련 현안들에서 EU 지도부와 갈등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는 여당 연합의 집권이 계속되는 한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총선 승리 후 집권 연정은 개헌을 추진하였으나, 개헌의 결과는 정부가 헌법재판소, 중앙은행,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EU의 회원국 간 난민 수용 할당을 거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EU의 이념과 역행하는 극우 민족주의적 방향으로 나아가 EU와 갈등을 지속하고 있음.

**오르반 총리, 2010년 취임 후 사법부와 검찰 장악을 통해 3권 분립을 노골적으로 침해**

- 1998년 7월~2002년 5월 총리직을 역임한 뒤 2010년 5월 총선 승리로 다시 총리직에 취임한 오르반 총리는 2014년 및 2018년의 총선에서 연이어 승리하여 총 14년째 재임해 오면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모든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는 제도 개혁을 장기간에 걸쳐 실행에 옮기고 있음.
- 오르반 총리는 2010년 다시 총리직에 취임하자 검찰총장 임기를 6년에서 9년으로 늘리고 자신의 측근이자 2000~06년 검찰총장을 역임한 Peter Polt를 임명한 데 이어 2012년에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청장에 역시 자신의 측근인 Tunde Hando를 임명하였음.
- Polt는 2019년 11월 재임명되어 2021년 5월 현재 계속 재임 중이며, Hando는 2019년 11월 퇴임 후 2020년 1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어 오르반 총리의 사법부 장악 강화에 계속 협력하고 있음.
- 오르반 총리와 여당 연합은 2011년 사법 권력 장악을 위한 개헌안을 통과시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정부가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면서 늘어난 4명을 여당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만들었음.
- 2012년에는 사법부와 검찰을 친여(親與) 성향으로 물갈이하고자 판사와 검사의 정년을 70세에서 62세로 단축하여, 총 274명의 판·검사가 강제 은퇴를 당하고 오르반 지지 성향의 젊은 법조인들이 그 후임자로 임명되었음.
- 2014년 오르반 총리는 1990년에 폐지되었던 사형제의 부활을 시도하였고, 이에 헝가리 야권과 인권단체들은 오르반 총리가 공포 정치를 한다며 강하게 비난하였음. 결국 사형제 도입을 허용하지 않는 EU가 나서서 압력을 가하자 오르반 총리는 사형제 부활 추진을 중단하였음.

## 정치동향

###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정법원 설립 추진으로 국내외의 반발 초래

- 2018년 4월 총선에서 의회 의석의 66.8%를 차지하며 의회를 장악한 여당 연합은 동년 12월 법무장관의 감독을 받는 행정법원을 1년 내에 설립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 동 법안의 핵심 내용은 선거법 관련 사건, 부정·부패 사건, 집회·시위 등 공안 사건 등 정부와 관련된 사건을 기존 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에서 처리하며, 행정법원 판사에 대한 임용, 승진, 교육의 권한을 대법원장이 아닌 법무장관이 행사한다는 것임. 이는 정부-여당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수사·기소는 물론 재판에 대해서도 법무장관이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함.
- 행정법원 설립안 통과에 대해 사법부 독립성의 침해라는 비판이 헝가리 야권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쏟아지고 EU도 강한 압박을 가하자, 2021년부터 7년 간 헝가리에 배정된 EU 보조금 201억 유로의 삭감 가능성을 우려한 헝가리 정부는 2019년 5월 행정법원 설립안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발표하였음.
- 그러나 동년 7월 오르반 총리의 측근인 라슬로 쿠피베르 국회의장이 "여건이 되면 언제든지 행정법원 설립을 재추진할 것"이라 공언하자 9월 16일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헝가리의 사법부 및 언론의 자유 말살 정책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으며, EU 집행위원회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할 수 있는 제도를 전면 철회할 것을 헝가리 정부에 요구한 결과 헝가리 정부는 11월 1일 행정법원 설립을 포기한다고 발표하였음.

### 오르반 총리, 코로나19 사태를 구실로 제정된 코로나19 방지법을 통해 독재 권력 강화

- 코로나19 사태가 헝가리로 확산되자 오르반 총리는 방역 강화를 구실로 2020년 3월 11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3월 30일 헝가리 의회는 코로나19 방지법을 찬성 137표, 반대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하였음.
- 동법은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총리에게 근거 법률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통치할 수 있는 특별권한을 종료시킨 없이 부여하고, 총리가 국가 비상사태를 의회의 승인 없이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모든 선거를 무기한 연기하고, 민주적 통제의 감소와 언론에 대한 정부의 공격적 조치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음.
- 동법의 핵심은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임의로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국가비상사태에서는 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법률을 제정·발효시키거나 기존 법률의 효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음.
- 이에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4월 12일 "헝가리 정부가 허용 한도를 넘어서면 (EU 차원의)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하였음. 이어 4월 17일 유럽의회는 코로나19 방지법이 "유럽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하였으며, 5월 12일 다비드 사솔리 유럽의회 의장은 오르반 총리에게 14일 코로나19 방지법에 대해 토론하자는 서한을 보냈으나 거부당했음.
- 다만, 5월 26일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데 이어 6월 17일 코로나19 방지법 폐기가 의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정부가 공공보건상의 이유로 재차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가짜 뉴스 처벌' 등을 위한 법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남겼음.

## 정치동향

### 코로나19 방지법 통과 이후 여당 연합의 폭주로 언론 자유 및 인권 침해, 야당 탄압 등 가속화

- 헝가리 의회는 2020년 3월 30일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에 대해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 기자에게는 최고 5년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도 코로나19 방지법과 함께 통과시켜, 오르반 총리가 언론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국내외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음.
- 동 개정안은 가짜 뉴스 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으며, 가짜 뉴스에는 '정부 당국의 코로나19 대응 효과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음.
- 헝가리 언론은 동법의 통과로 관영 매체들이 특히 독립 언론인들에 대해 혐오 캠페인을 펼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실제로 2020년 5월 14일 AFP 통신은 동법 시행 후 정부에 의해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 중인 사건이 86건이라고 보도하였음.
- 2020년 5월 19일 성별 변경을 금지하는 법안이 헝가리 의회에서 찬성 134표, 반대 56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되자, 유럽의 인권 단체들은 동 법안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 선택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 비판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도 성명을 내고 동 법안이 헝가리의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동시에 그들을 더 큰 적대감과 차별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라 비판함.
- 이어 5월 22일 헝가리 정부 산하 국가감사사무소는 좌파 성향 야당인 민주연합이 제출한 2017~18년 재무제표가 당의 세입과 지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그림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민주연합에 대해 재정 관련 부정행위를 이유로 국고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음. 당시 민주연합은 약 157만 달러의 국고 지원금을 받았음.
- 이에 민주연합은 당국의 절차가 불법이며, 국가감사사무소가 오르반 총리의 정치적 의지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하였음. AP통신에 의하면 여당 연합 출신의 도모코시 라슬로가 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국가감사사무소는 지난 수년간 여러 야당에 대해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정비리 의혹을 이유로 국고 지원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음.

## 사회동향

### 극우 민족주의의 득세로 난민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소수자에 대한 혐오 증가

- 헝가리는 게르만 민족 또는 슬라브 민족으로 이루어진 주변국들과 달리 마자르 민족이 주축을 이룬 나라로 과거 오스트리아 제국 치하에서 민족의식이 대단히 강했으며, 1차 세계대전의 결과 공화국으로 분리 독립한 이래 민족주의 성향이 더욱 강해져 현재 EU 회원국들 중에서도 외국인과 소수자, 특히 집시로 알려진 로마족(Romani) 주민에 대한 적대감이 가장 심한 나라로 꼽히고 있음.
- 이러한 성향은 오르반 총리 집권 후 극우 민족주의가 득세하며 더욱 현저해졌으며, 시리아 내전의 결과 유럽으로 대거 유입된 중동 출신 난민에 대한 사회 전반의 혐오감과 적대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EU 차원의 난민 분산 수용을 거부하고 국경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여 EU와 갈등을 빚고 있음.

### 시민사회의 취약성과 정부 여당의 탄압으로 비정부기구(NGO)들의 활동 미약

- 헝가리의 시민사회는 서유럽에 비해 매우 빈약한 수준으로, 사회단체들은 자금 부족과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음. 현재 헝가리 납세자들은 개인 소득의 1% 정도를 사회단체나 자선조직에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보건, 문화, 지역사회 자선 등의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치, 사회 관련 분야는 소외됨.
- 헝가리 정부는 2010년 오르반 총리의 재집권 이래 정부 방침에 동조하지 않는 NGO(비정부기구)들에 대해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외국의 이익을 위해 매국적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무실 급습 및 압수수색 등 갖은 탄압을 가하여 EU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음.
- 특히 정부 투명성 제고, 성소수자 및 여성의 권리 옹호, 환경보호 등을 추구하며 헝가리 정부의 극우 보수주의 정책과 충돌하는 NGO들이 탄압의 주요 대상임.
- 2017년 여당 연합은 NGO들의 재정적 기반을 보다 상세히 노출시키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통과시켰는데, 동 법안은 헝가리 태생의 유대계 미국인 금융가로 헝가리의 민주주의 확립을 촉구하는 운동을 펼치는 조지 소로스(George Soros)의 지원을 받는 NGO들을 색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어 2018년 여당 연합은 헝가리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특히 난민)을 돕는 것으로 판단되는 NGO들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통과시켰음.

### 오르반 총리 재집권 이후 언론자유도는 매년 하락 추세

- 오르반 총리의 언론 탄압으로 인해 헝가리는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4월 21일 발표한 "2021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조사대상 180개국 중 31.76점(점수가 0에 가까울수록 언론자유도가 높음)으로 92위를 기록, 전년보다 3계단 하락하여 EU 회원국 중 최하위인 불가리아(112위) 바로 위의 순위에 그쳤음. 이는 코모로(84위), 감비아(85위), 아이티(87위), 레소토(88위) 등 아프리카, 카리브해 지역의 빈국들보다도 낮은 순위임.
- 오르반 총리 재집권 이후 동 지수에서 헝가리의 순위는 2013년 56위를 기록한 이후로 하락을 거듭하여 2018년 73위에서 2019년 87위로 급락한 바 있음.

## 국제관계

### 오르반 총리의 우파 민족주의적 정책에 따른 시민의 권리 침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 난민 수용 거부 등으로 EU와 잦은 마찰 발생 중

- 헝가리는 EU(2004년 가입)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1999년 가입)의 회원국이며, 헝가리의 국제관계는 기본적으로 이 양대 국제기구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있음.
- 그러나 2010년 오르반 총리의 재집권 이후 중동으로부터의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폐쇄와 EU 차원의 회원국별 난민 할당 수용에 대한 반대, 성소수자 및 집시 민족에 대한 공개적인 차별과 박해 등 극우 민족주의적 정책으로 EU와 갈등을 거듭하고 있음.
- 오르반 총리는 EU 집행위원회가 추진하는 난민의 역내 강제할당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2016년 10월 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음.
- EIU는 2021년 4월 헝가리에 대한 Country Report를 통해 보수 우파 연정이 최소한 2022년의 차기 선거 때까지 정권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따라서 극우 보수적 민족주의에 경도된 FIDESZ가 주도하는 헝가리 정부와 EU 집행위원회간의 마찰이 특히 3권 분립 침해, 집시에 대한 박해, 난민 수용 거부 등의 부분에서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
- 코로나19 사태의 해결을 위한 EU 전체의 공동 노력이 요구되는 동안은 헝가리 정부와 EU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헝가리 정부가 코로나19 방지법을 남용하여 민주주의 유린과 언론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에는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음.
- 극우 민족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오르반 총리와 여당 연합은 난민을 비롯한 외국인 혐오를 촉발하는 발언으로 비판받고 있음. 오르반 총리는 2020년 3월 13일 현지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는 대체로 외국인들이 (헝가리로) 들어왔고, 외국인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헝가리 내의 이란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이 바이러스가 처음 나타난 것이 증거"라고 주장하며, 코로나19 발병을 난민과 연결시키는 발언도 하였음.

### 인접국들 중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와는 민족 문제 등으로 갈등 잠복

- 인접국들 중 루마니아와는 트란실바니아 지방에 거주하는 약 120만 명의 헝가리계 주민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와는 과거의 영토 할양과 현재까지 슬로바키아 내에 거주하고 있는 헝가리계 주민 문제 등으로 뿌리 깊은 불화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1차 세계대전 후 트리아농 조약에 따른 오스트리아-헝가리 2중 제국의 해체 과정에서 오스트리아의 일부였던 보헤미아, 모라비아와 헝가리의 일부였던 슬로바키아가 통합하여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하면서 헝가리 영토의 일부와 동 지역에 거주하는 헝가리계 주민들이 현재의 슬로바키아로 귀속된 것이 현재까지 양국간에 지속되고 있는 양금과 갈등의 원인임.
- 다만,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모두 폴란드, 체코와 함께 1991년 EU 및 NATO 가입을 목표로 비셰그라드(Visegrad) 그룹을 결성하여 역내 상호 협력을 추진하면서 최근 양국 관계가 호전되었으나, 오르반 총리의 극우 민족주의적인 돌출 발언으로 인한 외교관계 경색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 국제관계

### EU와 NATO의 회원국임에도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가속

- 헝가리는 EU와 NATO의 회원국임에도 이들 양대 기구들과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와 적극적인 우호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오르반 총리의 극우 민족주의적 성향과 독재 추구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공유하는 부분이 많은 점도 이러한 우호관계 추진에 일조하는 것으로 보임.
- 오르반 총리는 크림 반도 침공 사태로 시작된 EU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가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제재 해제를 주장하는 등 친러시아적인 행보를 지속하고 있음. 이러한 헝가리 정부의 태도는 향후 EU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 푸틴 대통령은 2017년 2월과 8월 부다페스트를 방문하여 오르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가 총공사비(약 125억 유로)의 80%를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는 헝가리 Paks 원자력발전소 확장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으며, 오르반 총리는 2018년 7월과 8월 연이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졌음.
- 푸틴 대통령은 2019년 10월 다시 부다페스트를 방문하여 오르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의 헝가리 연결, EU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여 밀착관계를 더욱 과시하였음.
- 금년 중 착공 예정인 Paks 원자력발전소 확장 공사(발전용량 1,200MW 규모의 원자로 2기 증설)는 러시아 국영 원자력기업 Rosatom이 맡아 진행할 예정임.
- 헝가리 보건부는 2021년 1월 20일 EU 회원국 중 최초로 러시아산 스푸트니크V 백신의 사용을 승인 하였으며, 이튿날인 1월 22일 헝가리의 Peter Szijjarto 외무장관은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와 200만 회분의 스푸트니크V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Gazprom과는 오는 9월 만료 되는 기존의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15년 간 연장하는 재계약도 체결하였음.

### 중국, 헝가리를 일대일로 유럽 지역 거점으로 삼기 위한 작업에 박차

- 헝가리는 2015년 중국과 신 실크로드(New Silk Road) 협정 체결을 통해 중국의 중부 유럽 내 중점 협력국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공공 프로젝트를 비롯한 금융, 산업(항공·화학·전기전자) 전반에 걸쳐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 중임.
- 2020년 4월 24일 헝가리 정부는 발칸 반도를 관통하는 고속철도 건설 자금의 조달을 위해 중국 정부와 18억 5,500만 달러 규모의 차관협정을 체결하였음. 동 사업은 중부 유럽과 중국이 운영 중인 그리스의 피레우스 항을 철도로 연결하는 프로젝트의 구간의 일부로,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의 일환임.
-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 프로젝트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와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를 연결하는 총연장 350km의 고속철도 건설로, 차관조건은 20년 만기(원금상환 유예기간 5년)에 연이율 2.5%임. 헝가리 정부에 의하면 전체 건설자금의 85%를 동 차관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나머지 15%는 헝가리 정부가 직접 조달한다는 계획임.
- 총연장 350km 중 헝가리 구간은 160km, 세르비아 구간은 190km이며, 세르비아 구간의 건설도 중국이 2018년 세르비아 정부에 2억 9,76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면서 본격적으로 구상되었음.

## 국제관계

- 동 프로젝트는 일대일로 사업의 사상 첫 EU 역내 진출로, 코로나19 사태에서 중국에 대한 책임론이 미국과 EU에서 쏟아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차이나머니'를 통해 동유럽 국가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EU 분열을 노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EU는 이번 철도 건설에 대해 중국의 자금 지원이 경제적, 재정적 동기뿐 아니라 정치적 동기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음. 아울러 헝가리 야권에서는 동 프로젝트에 대해 세금 부담 가중과 부패 위험을 문제삼으며 비난하고 있음.

### 중국산 코로나19 백신 생산, 중국 대학 분교 유치 등으로 중국과의 밀착은 더욱 가속화

- 헝가리는 2021년 1월 14일 중국산 시노팜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1월 29일 EU 회원국 중 최초로 중국산 시노팜 백신을 승인하고 50만 회분을 시노팜에 주문, 현재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백신과 함께 접종 중임. 아울러 Szijjarto 외무장관은 5월 31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한 뒤 헝가리 동부 데브레첸에 현재 건설 중인 제약공장에서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한편, 4월 29일 헝가리 혁신부는 중국 푸단대학교와 화상 회의를 열고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 푸단대 분교를 설립하는 합의문에 서명하였음. 분교는 이르면 오는 2024년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 의학 등의 전공을 시작으로 개교할 예정이며, 학생 수는 6천여 명, 교수진은 약 500명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짐.
- 설립에 소요되는 총액 15억 유로의 예산 중 13억 유로는 중국 국영은행이 헝가리 정부에 제공하는 차관으로 조달되고, 학교 건물의 건축은 중국 건설기업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며, 중국인 기술자와 노동자들이 파견되어 공사를 담당하는 등의 '전형적인 일대일로식' 계약 조건임. 아울러 건물 신축 예정 부지는 원래 지방에서 부다페스트로 올라온 대학생들을 위한 낮은 임대료의 공공주택 건설 예정지로 알려짐.
- 이에 6월 5일 부다페스트에서는 1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푸단대 분교 설립을 반대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에 참여하는 등 반중 감정이 고조되고 있으나, 오르반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EU와의 관계에서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품고 동 프로젝트를 강행할 계획임. 유럽 언론들은 중국이 푸단대 부다페스트 분교를 자국의 권위주의적 정치관 및 세계관을 다른 나라들에 전파하려는 이른바 '전파공정'(傳播工程)의 유럽 내 교두보로 활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

## 외채상환태도

### 2013년 IMF 대기성차관을 조기상환하는 등 외채상환태도 양호

- 헝가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 악화로 외채상환 부담이 증대되자 IMF와 2년간 157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2011년 말 IMF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지원 조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점진적 경기회복에 힘입어 추가 지원을 받지 않고 외채상환 문제를 해소하였음.
- 2013년 8월 IMF 지원잔액 28.5억 달러를 조기상환하였으며, 현재 외채의 이자연체 등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수준임.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미평가 (2016.06)	4등급 (2016.01)
S & P	BBB (2020.04)	BBB (2019.02)
Moody's	Baa3 (2020.09)	Baa3 (2016.11)
Fitch	BBB (2019.02)	BBB- (2017.11)

### 국제신용평가3사의 투자적격 등급 보유

- S&P, Moody's, Fitch 3사는 헝가리에 대해 모두 투자적격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나, 투자적격 등급 범위 내에서는 최하위권 수준임.
- 한편, OECD는 헝가리에 대해 2016년 1월 이후 OECD 회원국이자 유로존 고소득국임을 이유로 국별 신용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 헝가리는 EU 회원국으로서 EU 역내의 상품 및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시장 확보, 유럽 중앙부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바탕으로 제조업 기반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전 세계적 여파로 인한 내수와 수출의 동반 침체로 -5.0%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8년 4월 총선에서 여당 연합이 전체 의석이 66.8%를 획득하여 2022년 차기 총선까지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할 전망이나, 포퓰리즘과 극우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독재 권력 강화를 추진하며 사법부 독립성 침해와 언론 탄압을 자행하여 국내외적인 반발이 지속되고 있음.
-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회원국으로 역내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오르반 총리의 배타적인 극우 민족주의적 정책 및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강화로 EU와 잦은 마찰을 빚고 있음.
- EU 회원국으로 재정위기 발생시 EU 차원의 지원을 통한 안정화가 가능하나, 2016~19년의 4년 연속 연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월평균수입액의 3개월분에 미달하고 2020년 말 D.S.R.이 54.6%로 추정되는 등 단기외채 상환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